

데스크 시각

애도의 방식

김미은
문화1부장

이 지났지만 하나도 변한 게 없는 세상이 안 타깝다”고 했다. 추모의 마음을 담은 곡 연주 후에는 박수 없이, 잠시 머물다 그대로 공연장을 떠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고향의 봄’과 ‘얼굴’

오랜만에 고등학교 은사를 만났다. 가슴에 단 노란 리본이 눈에 띄었다. 선생님은 세월호 참사가 남의 일 같지 않다고 했다. 세상 떠난 아이들과 교사들, 남은 아이들이 모두 내 학교 아이, 동료 교사처럼 생각된다고 했다. 돌아오는 길, 종이 한 장을 건네받았다. 시가 한 편 적혀 있었다.

최혜정 교사의 마지막 말은 담은 시였다. 그날 신문에서 읽은 최교사의 마지막 말이 잊히지 않았다. 시를 읽기 전엔 최교사에 대해 알지 못했다. 열 명의 아이들을 구하고 “걱정하지 마. 너희부터 나하고 선생님 나갈게.” 마지막 한 마디를 남기고 떠난, 스물넷의 어린 교사였다.

다음날 광주시향 연주회에 다녀왔다. 베토벤 ‘교향곡 1번’을 마지막으로 공연이 끝나자 김영언 부지휘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4·19, 5·18 그리고 이번 일까지 오랜 세월

세월호 사건 다음날, 휴대폰으로 시 한편을 받았다. ‘얼리를 막대기로 뱃구멍 수시듯 하는 대책에 열 받은’ 지인이 ‘오직 네 깊음을 믿고 벌벌떨 일어나라’고 외치는 시였다. 떠난 이들에게 미안하다는 시를 보낸 이도 있었다. 사건 후 열린 음악회에서는 추모곡들이 연주됐다. 바이올리ニ스트 조진주는 ‘고향의 봄’을 들려줬다. 피아니스트 이상복은 ‘얼굴’과 ‘엄마야 누나야’를 연주했다. 모두 어릴 때부터 자주 듣던 곡들이다. 하지만 눈물을 뚫는 이들이 보였다. 불이 켜지자 관객들은 조용히 악석을 빠져나갔다.

공감 능력 없는 대통령

여칠 전 ‘나 거기 없소’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다. 운전 중 라디오에서 들었던 노래 ‘내 영혼 바람 되어’가 소재였다. 그 글에 썼었다. 어찌면 지금 이 시간 어디선가 이 노래를 들었던 사람은 나처럼 떠난 이가 전해주는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글이 나고고 문자를 받았다. ‘같은 시각’ 그 노래를 들었던 이였다. 차를 한 권에 세워두고 노래 제목을 메모했다고, 이후 노래를 듣고, 가사를 읽으며 울고 있다고. 펜이 ‘흔자’가 아닌, ‘함께’라는 생각에 위로가 됐다.

힘들 때 가장 두려운 게 뭘까 생각해본다.

아마도 그 고통 속에 나 혼자 있다는 기분

아닐까. 이번 사건 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 “미안하다.” 내 식구 같고, 내 친구 같은 이들의 죽음과 유족의 아픔에 공감(共感)했기에 가능한 말이다.

사건 발생 14일이 되어서야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한 대통령의 공감 능력은 전무해 보인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내가 어떻게 할건지 그 마음으로 해주십시오.” 합동분향소를 찾은 대통령에게 외치는 유족의 절규가 가슴을 친다. 유족들에 의해 내쳐진 대통령의 조화(弔花)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놀라게 느껴야 한다.

하루만 지나면 가정의 달이다. 하지만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줄 자식이 없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부를 ‘스승의 은혜’를 들어줄 선생님이 없다. 바람이, 햇빛이, 별빛이 돼 우리를 위로하는 ‘떠난 이들’이 있을 뿐이다.

‘그곳에서 물지마오/ 나 거기 없소/ 그곳에서 잠들지 않았다오/ 그곳에서 슬퍼마오/ 나 거기 없소/ 그 자리에 잠든 게 아니라오/ 나는 천의 바람이 되어/ 천란히 빛나는 눈빛되어/ 곡식 영 그는 햇빛 되어/ 하늘한 가을비 되어/ 밤이 되면 저 하늘 별빛 되어 부드럽게 빛나다오/ 그곳에서 슬퍼 마오/ 나 거기 없소/ 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고.’(김효근 곡·송기창 노래 ‘내 영혼 바람 되어’)

/mekim@kwangju.co.kr

옴부즈맨 칼럼

여론 재판과 유죄 추정

문방진
변호사

지난 주에는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세월호와 이 사고로 희생된 어린 학생들의 소식에 온 나라가 침울하다. 선박을 무리하게 개조하고,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해운사 측의 책임인가? 궂은 날씨에도 위약금 때문에 수학여행을 강행한 학교 측의 책임인가? 항로이탈과 승객의 안전을 뒤로 한

채 먼저 침몰하는 배에서 빠져나온 선원들의 책임인가? 사고신고를 접수하고도 신속하게 구조활동을 벌이지 못한 정부의 책임인가? 엔터리 방송으로 구조활동에 혼선을 빚게 한 언론사의 책임인가? 벌써 여론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최근 한국형 사정학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국과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평균에 대한 유죄 추정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은 진범 여부를 확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다른 국가에 비해 진범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더 강하고, 설사 무고한 사람을 유죄로 잘못 처벌할지도 반드시 유죄판결을 내려서 누군가를 처벌하려는 경향이 높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우리 국민들의 사법

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이유 중의 하나라고 분석했다.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왜 우리 국민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언론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고 검찰의 수사 상황이 중계방송 식으로 보도되거나 국민들 마음속에 이미 유죄의 짐이 자리 잡게 되고, 나중에 무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이는 믿을 수 없는 판결이 되어버린다. 사법부의 판단보다 앞서가면서 수사기관의 발표를 그대로 쓰다니는 언론이 있는 한 나중에 그들이 무죄판결을 받아도 국민들 뇌리에는 범죄자로 낙인되어 남아있게 된다. 이렇듯 우리는 죄가 있건 없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검찰이 피의자를 언론에 노출시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론재판, 언론재판을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루한 재판을 기다리기보다는 이런 여론재판에 참여하여 미리 돌팔매질을 해버린다.

이제 여론 재판의 칼날은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 최근 칠곡·울산 계모의 의붓딸 살해치사 사건에 대해 법원은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지나치게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인터넷에서는 판사 ‘심상 털기’가 벌어지고 있다. 이 사건 재판장의 이름이 한때 대형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이슈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여론의 재판은 유죄판결과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불확실한 정보만으로 이루어진 여론의 재판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알아야 한다. 살아남은 자들의 변명에도 한 번쯤 퀴를 기울려 보자.

기고

농업·농촌의 재발견 ‘사회적 치유 기능’

최익주
농협중앙회 구례교육원장

농업·농촌의 역할이 농산물 생산기반 중심에서 사회적 치유 기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과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치유기능의 농업(care farming)’이란 농사일과 농촌경관을 활용하여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농업활동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일과 관련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린이까지 고객에 맞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간호사 등 전문 인력 20여명이 도움을 주고 있어 유기농산물 판매를 겸해 1주일에 1000여 명 이상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예치료나 동물매개치료 등 일부 체험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는 있으나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 농촌진흥청의 교정시설 수형자 원예치료 프로그램이나 서울시 치매 어르신 대상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농촌진흥청이 원예치료가 치매나 불안감과 대민예방·우울증 등 정신적 치유에도 월등한 면모는 원예치료의 경우 37.3%를 넘어서는 등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치유농장을 잘 활용할 경우 고령인의 삶의 보람과 의료비 절감 효과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농업·농촌도 새롭게 조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촌진흥청이 원예치료가 치매나 불안감과 대민예방·우울증 등 정신적 치유에도 월등한 면모는 원예치료의 경우 37.3%를 넘어서는 등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치유농장을 잘 활용할 경우 고령인의 삶의 보람과 의료비 절감 효과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농업·농촌도 새롭게 조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안전의식이 생활문화로 정착되는 사회 만들자

안전불감증과 책임감의 부재는 세월호를 차지한 바다속에 가라앉혔다. 때늦은 후회를 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마저 자연의 거친 바다는 이를 용납하지 않고 우리에게 침묵의 경고만을 주고 있다. 우린 언제까지 ‘소잃고 외양간을 고친다’고 난리법석을 떨어야만 할까? 그리고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졌는지 확인은 제대로 하였을까? 평상시 집에 소화기와 비치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며, 어쩌다 화재 경보기가 울려도 누군가 또 장난을 친 거겠지! 라고 생각하는 현실에서, 우리를 일상에서 안전불감증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급속한 고도 산업사회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빨리빨리리를 외쳤고, 비용절감과 수익증대는 오늘날의 물질적 중요성을 이루었지만 그 속에서 안전불감증이라는 정신적 질환이 독버섯처럼 자라나

이제는 치유가 어려운 현실이 되고 말았다.

1년 전 해병대캠프 사고, 불과 2달 전 경주 마나우리조트 불과 사고를 목격하고도 당시의 심각함은 금방 기억속에서 잊혀진다. 어디를 가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들이 시설에는 형식상 안전관리자가 있지만 이들에 실제 권한과 책임이 얼마나 부여되어 있는가를 진단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어 이들 관리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자질이 필요하다. 기본에 충실히 안전점검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하염없는 메아리만 되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

가끔 집 주변의 영화관에 갈 때마다 느낀다. 상품 광고가 우선이고 대피로 설명이 우선이 아닌 현실, 이제는 입으로 외치는 안전 의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안전에 대한 의식이 생활 속에서 문화로 정착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소중한 하루하루다. 이러한 소소한 기쁨이 진도 세월호 배안에서 기적처럼 울려퍼지길 기원해 본다.

▲김도연·영암군 영암읍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국가 개조 밝혔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참사 발생 열흘째에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사고 수습이 더디고 민심이 악화되면서 떠밀려 한 사과라는 점에서 쓸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주제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 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 데 대해 뭐라 사과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받을 수 있을지 가슴이 아프다”며 “이번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돼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애도로 내각 전체가 안전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국가 개조를 한다는 자체로 근본적인 점에서 한 국민 안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총리실이 직접 관掌하는 ‘국가 안전전략’을 신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및 관료사회 적폐 등의 해결의지를 밝혔다.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검

국민들이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정부는 대형 참사가 발생 때마다 대통령이 사과하고 각종 대책을 내놓는 등 부산을 떨었지만 달라진 게 없었다. 법과 제도 개선,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을 만들었어도 사고 원인은 항상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人災)였다.

안전시스템이든, 안전처를 설치하든 이를 운용하거나 대상이 되는 것은 사람이다. 기본과 원칙을 갖추지 않는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다. 안전을 위한 매뉴얼은 넘쳐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행을 해 보았는가.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검은 유착의 시스템부터 개조시켜야 한다. 정부 부처는 물론 청와대와 협력 등 정부 부서와 기관·단체 등을 가릴 것 없이 무능한, 범세 나는 인사들은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 그동안 박 대통령의 인사 난맥상에 대한 반성도 뒤따라야 한다.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50% + 공론조사 선거인단투표 50% 방식으로 다음달 10일 정홍제 육관에서 치르기로 했다. 하지만,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는 전남 도당의 계파 간 갈등으로 전권위원회 회장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새정치연합의 후보 공천은 다음달 초 연휴가 끝나고 공식 후보 등록(15~16일)이 이뤄졌다. 하지만 후보들의 공약이나 정견 발표도 그만큼 미뤄질 수밖에 없다.

새정치연합은 광주시장의 경우 공천 방식 조작 확정하지 못했다. 다만 후보 공천에 대한 권리가 안철수 공동대표에게 위임됐고, 안 대표도 조만간 입장문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전략공천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광주 지역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경선은 지난 26일 ‘공론조사 선거’로 날짜를 정했다. 전남지사 후보 경선은 29일에야 ‘국민

도 공천 작업을 속히 마쳐야 할 것이다.

無等鼓

북유럽 최고의 신(神) 오딘과 토르, 프레이 등을 숭배했던 스웨덴 육상에서는 9년의 재임기간이 끝난 왕은 살해되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가끔은 왕의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 헌신 제물로 바쳐졌다. 유플라리의 ‘온왕은’이 같은 관습을 이용해 81년 동안 왕위에 머물렀다.

‘9년 후 죽어야 하는’ 문면을 파기하기 위해 온왕은 오딘에게 자신의 칭号를 바친다. 신은 제물을 받아들였고, 왕에게는 열 명의 아들이 있었기에 오랫동안 왕위를 지킬 수 있었다.

다. 여덟 번째 제물을 바쳐야 할 시기에 왕은 자리에 누워 지내

야 할 정도로 노쇠해졌다. 그러나 누운 채로나마 왕좌를 지키고 싶었던 그는 다시 아홉 번째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

그리하여 9년을 더 살 수 있게 됐지만 이제는 너무 늙어 어린아이처럼 우유병을 빨아야 하는 시경에 까지 이룬다. 드디어 열 번째 아들이 차례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엔 모든 백성이 대신하고 나섰다. 왕은 죽고, 유플라리의 온왕처럼 아래 문화로 기록된다.

9년, 혹은 8년이라는 기간은 통치권의 한계를 의미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텔로이의 대관식 축제

특히, 오늘날 국가들이 각종 재난이나 스캔들로 지도자의 리더십이 혼자나 고위 책임자의 사퇴 등을 통해 정국을 해쳐나간다는 점은 아들을 대신 희생한 온왕의 사례와 비교할 때 시사점이 적지 않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려는 불가피한 선택일 터다. 하지만, 매번 희생양을 찾는다면 유플라리의 온왕처럼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

/홍행기 경제부장 redplane@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tbl_r cells="3" ix="3" maxcspan="1" maxrspan="1"